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 마련

② 4월 6일 민당정 간담회 논의

-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내년 3조 원 이상, '27년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
- 탄소중립 지원 프로그램 도입, 전략작물·친환경직불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4월 6일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정부 농정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수준으로 확대'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불제 확대·개편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과 미래농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농가 소득 직접 지원 강화 >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가 당 직불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등 직불제가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해왔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해 농가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중소농 소득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가 수입·매출 변동에 대비한 보완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안에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가별 수입·매출액을 파악·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농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등록과 소득신고를 하는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본직불제는 2020년 시행 이후 성과를 평가하여 중소농을 중심으로 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직불금 수령을 위해 농업인이 이행해야 하는 준수사항은 실제 농업현장에 적합하고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간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25~20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 친환경·전략작물 농가 직불금 확대 >

기본직불제 중심의 공익직불제를 보완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영농활동 촉진, 미래 농업인력 양성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산업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직불제를 확충한다.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농업분야에서 경종·축산분야가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 분야를 중심으로 농가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활동을 이행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검증된 활동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미래 농업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인력 구조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직불제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농지를 매도하여 영농에서 은퇴하는 고령농에게 경영 이양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모두 직불금을 지원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여 영농활동에서 은퇴하는 경우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지은행이 고령농으로부터 매입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최우선 제공한다. 이와 함께, 청년농에게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영농 정착지원금을 확대하여 청년농 3만 명 육성 계획을 차질없이 뒷받침한다.

그밖에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는 밀·콩·가루쌀 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지속 확대하여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밀·콩 자급률을 높여 나간다. 친환경직불은 인증농가를 규모화하고 인근 농가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간다. 또한, 경관보전직불을 통해 경관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 지원체계 정비, 부정수급 차단 >

농업직불제 확대·개편에 맞추어 직불제의 추진체계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2025년까지 데이터에 기반한 공익직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수급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직불제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농가가 탄소배출 저감 활동 등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과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향은 농가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미래산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향후 직불제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3조 원 이상,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 인포그래픽
별첨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

담당 부서 <총괄> <기본직불> <경영이양> <경영안정>	농업정책관실 공익직불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재형 (044-201-1771)
		담당자	서기관	김상현 (044-201-1772)
		담당자	서기관	강민수 (044-201-1776)
		담당자	사무관	서지예 (044-201-1775)
	농업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덕민 (044-201-1711)
		담당자	서기관	최민지 (044-201-1715)
<탄소중립>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광일 (044-201-2631)
		담당자	사무관	이명현 (044-201-2632)
<전략작물>	가루쌀산업육성반	책임자	과 장	안유영 (044-201-2911)
		담당자	사무관	한태희 (044-201-2915)
<친환경농업>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친환경농업과	책임자	과 장	주원철 (044-201-2431)
		담당자	사무관	박치형 (044-201-2435)
<친환경축산>	축산정책관실 축산환경자원과	책임자	과 장	정경석 (044-201-2351)
		담당자	사무관	백재관 (044-201-2352)
<경관>	농촌정책국 농촌계획과	책임자	과 장	하경희 (044-201-1551)
		담당자	사무관	이지숙 (044-201-1564)
<청년농>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	책임자	과 장	남현수 (044-201-1531)
		담당자	서기관	이승욱 (044-201-1532)

붙임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농업인 경영위험 완화 및 중소농 소득안정

경영안정프로그램 도입	기본직불제 개편	경영이양직불 개편 및 청년농 육성
- 수입·매출 정보에 기반하여 농가 경영위험 완화 - 농가 수입·매출 파악 및 검증 시스템 마련	- 중소농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보전 효과 향상 - 준수사항을 현장 적합성과 공익기능이향성도도록 정비	- 농지를 매도하여 은퇴하는 고령농에게 직불금 지급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강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직불제 확충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탄소중립 지원 프로그램 도입	친환경작물 및 경관보전직불 확대·개편
- 말콤가루쌀 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지원 확대 - 재배작물 전환 및 중장기 생산유지를 위한 유인 제공	-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 - 경종·축산분야, 규모화된 농가를 중심으로 시행	- 친환경농축산업의 집단화·규모화를 유도하도록 개편 - 경관작물 재배 및 국가중요 농업유산 보전·관리 확대

추진 체계

- ☒ 데이터에 기반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평가환류체계 정립
- ☒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및 연구개발 강화